

직불제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지금 낙농업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참으로 절박하기만 하다 희망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정책당국자들은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돈으로만 해결하려는데 참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국제경쟁력을 갖자고 외치는 현실을 잊고 있는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나 경쟁력 없는 농가들이나 모두 똑같이 죽이고 있는 낙농정책은 참으로 참담하다고 밖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까지 1차 산업인 우리 농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부채덩어리로 만들어 졌다.

지금 낙농산업의 집유일원화 사업도 원유수급 조절이라는 명목으로 출발하여 76%까지 참여하였으나 원유는 한 방울도 수급조절은 하지 못하여 지금은 32% 수준의 농가들만 진흥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진흥회는 참으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 주도적 진흥회의 집유일원화 사업에는 참여하는 농가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주어서 더욱 참여토록 유도하고 원래의 목적대로 우유의 수급조절에 역할을 다하여야 함에도 참여하는 농가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이런 농림부(진흥회)가 또 이번에는 축산등록제를 거론하고 있다. 축산등록제를 원하고 있는 양돈, 양계 농가들은 무분별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을 사전



김연수
본회 이사

에 막기 위하여 축산등록제를 지지하고 있으나, 대가축인 한우나 젓소인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

서두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경쟁력 재고를 생각하면서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축산업등록제를 보면 규제 일변도의 등록제이기 때문에 한우나 젓소 농가들에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꼭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면 우리 젓소의 경우 정말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선행과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요사이 거론되는 친환경적 낙농을 할 수 있도록 축분(우분)을 이용 조사료를 생산 급여하는 그야말로 친환경 낙농이 실현되도록 이번 기회에 그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축사면적과 정화시설만이 아니라 조사료 생산기반을 삽입하여 조사료 생산 직불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축산업등록제는 규제도 규제지만 등록하는 농가들은 보호를 받는 산업이 되어야 진정한 등록제인 것이다.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여야 함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농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의 정책이기를 기원한다.

